

글로벌정책리포트

외교안보정책실
이윤식 수석연구위원

미국 중간선거 판세 분석과 한반도에 미칠 영향

2026년 10월 29일



미국 중간선거 판세 분석과 한반도에 미칠 영향

- 트럼프 후반기 안보·통상 압박과 향후 대응 과제 -

2026. 10. 29. (목) 외교안보정책실장 이 윤 식

- 미 중간선거는 민주당의 하원 탈환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상원 다수당도 경합하는 구도
 - Reuters/Ipsos 조사(10.22~26)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32%, 의회 투표 의향은 민주당 47% vs. 공화 36%. 복수 조사와 선거구 평가가 '민주 우세, 공화 열세'를 뒷받침
- 트럼프의 국내 정치적 약화가 한국에 대한 안보·통상 '요구 완화'를 뜻하지는 않음
 - 의회 견제가 강화되더라도, 미국의 산업·고용 보호와 동맹 부담 확대 요구는 지속될 전망
 - 백악관과의 합의뿐 아니라 의회 검증과 후속 이행까지 관리해야 하는 환경에 직면
- 한국의 위험은 미북 거래 가능성에 정부의 동맹관리·협상 이행 취약점이 겹치는 데 있음
 - 미 본토 위협만 줄이고 한국의 핵위협은 남기는 거래 경계. 정보협력 복원과 전작권 전환 조건을 검증하고, 미북 회담·일정 합의 등을 안보 성과로 포장하는 대응 차단
 - 대미 투자는 집행액보다 회수 조건·조달 비용·손실 책임이 핵심. 투자하고도 시장·수주 기술 접근을 확보하지 못하면 부담만 떠안을 위험
- 이에 우리는 동맹관리 실패의 책임을 묻고, 안보·산업 이익 확보를 위한 대응에 착수
 - 한국 배제 북핵 거래 반대 원칙 아래 미 의회 양당과 협의를 확대하고, 상임위 보고·투자 조건 검증·업계 과제별 의회 외교를 추진
 - 정부여당의 '동맹 이상무'라는 낙관론에는 '복원 실적' 요구로 철저히 검증하고, 그리고 투자 성과 포장에는 수익과 계약조건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

I. 문제 제기: 트럼프의 약화가 한국의 부담을 줄여 주는가

- 현지시간 11.3(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지지를 잃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최근 Reuters/Ipsos 조사(10.22~26)에서 트럼프 직무 지지율은 32%에 머물렀고, 의회 투표 의향은 민주당 47% vs. 공화당 36%로 나타남
 - 주요 선거 평가기관도 하원 다수당 교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상원에선 '경합주 승패'가 의회 권력의 향방을 결정할 전망
- 중간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간에 하원 전체와 상원 약 1/3을 선출하는 선거로,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남은 임기의 국정운영 조건을 결정하는 정치적 분기점

-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잃으면 국내 정책은 제약받고 대외 협상의 추진 조건도 달라짐. 한국에는 기존 합의의 이행과 추가 요구에 대응할 상대방의 정치 지형이 바뀐다는 의미
- 문제는 트럼프의 국내 정치적 약화가 한국 관련 안보 및 통상 분야에서의 ‘요구 완화’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
 - △관세, △대미 투자, △AI·반도체, △동맹비용, △대중국 공조 등은 미국의 산업 재건과 미중 전략경쟁에 연결된 요구
-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과제는 미국의 선거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동맹 관리’와 ‘협상 이행’ 관련 취약점들을 바로잡는 데 있음
 - 정보협력 갈등과 전작권 전환 이견, 대미 투자 조건 및 집행 등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미국 내 권력 재편을 맞으면, 의회 견제로 열린 협상 기회는 활용하지 못하고 행정부의 추가 요구에는 취약해질 우려
- 본 보고서는 최근 여론조사와 주요 기관의 평가를 종합해 선거 판세를 분석하고, 트럼프 후반기의 정책 변화가 한국의 안보와 통상에 미칠 영향을 전망
 -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바로잡아야 할 동맹·협상 관리의 문제와 당 차원의 대응방안, 즉 의회 외교·국회 점검·정책 대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II. 판세 분석: 민주당 우세 속 공화당의 의회 수성 위기

① 전국 여론: 경제 불만과 정권심판 여론이 ‘민주당 우세’를 견인

- 선거 구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경제·생활비 부담에 대한 불만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공화당의 의회선거 열세로 이어지고 있음
 - Reuters/Ipsos의 10월 22~26일 조사에서 트럼프 지지율은 32%에 머물렀으며, 경제 운영에 대한 지지는 25%, 생활비 대응에 대한 지지는 20%에 그침
 - Marist 조사에서는 투표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의 44%가 이번 선거를 ‘트럼프 반대 투표’라고 응답. ‘트럼프 지지 투표’라는 응답은 21%에 그쳐,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선거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
- 주요 조사기관의 투표 의향 조사에서도 ‘민주당 우세’가 공통적으로 확인
 -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기관과 시점이 달라도 유사한 결과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공화당에 불리한 전국적 환경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

[표 1] 주요 조사기관의 의회 투표 의향 조사

조사 기관	조사 기간	민주	공화	격차	우세
Fox News	10.9~12	54%	45%	9%p	민주당
CNN/SSRS	10.15~18	49%	39%	10%p	민주당
Reuters/Ipsos	10.16~19	47%	35%	12%p	민주당
NPR/PBS News/Marist	10.19~20	52%	44%	8%p	민주당
Reuters/Ipsos	10.22~26	47%	36%	11%p	민주당

※ Fox·CNN·Reuters/Ipsos는 등록유권자, Marist는 투표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 기준. 조사 대상·문항에 차이가 있어 수치를 단순 평균하거나 조사 간 차이를 시간적 추세로 해석하지 않음

- 최근 Reuters/Ipsos 조사에서 민주당 우세는 직전보다 1%p 줄었으나, 두 자릿수 격차가 유지되고 있어 판세 반전으로 볼 근거는 없음
 - 같은 조사에서 투표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의 선택도 민주당 53%·공화당 44%로 나타나, 민주당 우세가 등록유권자 전체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님
 - 복수 여론조사를 종합하는 Silver Bulletin의 10월 28일 기본 평균은 민주당 우세를 8.7%p로 제시. 개별 조사와 여론조사 평균 모두 민주당 우세를 가리키지만, 우세 폭의 등락과 실제 의석 확보는 구분할 필요

② 하원: 민주당의 다수당 탈환 가능성에 무게

- 하원은 전국적 ‘정권심판’ 여론이 의석 변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 선거. 지역구별 평가에서도 민주당 우세로 분류된 의석이 과반 기준인 218석을 넘어, 공화당의 다수당 유지가 어려워진 구도
 - Cook Political Report는 민주당 우세 선거구를 220석으로, 버지니아대 정치센터의 Sabato’s Crystal Ball은 223석으로 평가해, 두 기관 모두 민주당의 과반 확보 경로가 열려 있다고 판단

[표 2] 주요 선거 평가기관의 하원 판세 평가

평가기관	기준일	민주당 우세	경합	공화당 우세
Cook Political Report	10.23	220석	17석	198석
Sabato’s Crystal Ball	10.20	223석	12석	200석

※ 전체 435석, 과반 218석. ‘우세 지역’은 각 기관의 안전·유력·우세 등급을 합산한 것으로 확정 의석이 아님

- 공화당은 기존 경합지를 방어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공세가 확대된 지역까지 지켜야 하는 상황으로, Cook이 경합으로 분류한 17곳 가운데 12곳이 공화당 보유 지역이라는 점도 방어 부담을 보여줌
 - 민주당이 전국 여론의 우위를 유지하고 경합지에서 실제 투표로 연결한다면 하원 다수당 교체가 유력하며, 남은 쟁점은 민주당이 얼마나 안정적인 과반을 확보하느냐에 있음
- 하원 다수당 교체는 트럼프에게 ‘입법·예산 협상의 제약’과 ‘행정부 조사·감독 강화’라는 두 가지 부담을 부과
 - 민주당이 하원만 확보하더라도 행정부의 정책 집행과 협상 과정에 대한 자료 요구·청문회 등이 확대될 수 있고, 한미 간 합의도 백악관과의 협의뿐 아니라 의회 검증까지 대응해야 하는 환경으로 변화

③ 상원: 민주당의 장악 기회 확대, 경합주 승패가 최종 변수

- 현재 상원은 공화 53석 vs. 민주 47석(민주당 지지 무소속 포함)으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려면 전체 의석을 현재 47석에서 51석으로, 4석을 늘려야 함
 - 상원이 50 vs. 50으로 나뉘면 공화당 소속 부통령의 결정투표가 작동. 민주당으로는 단순한 의석 증가가 아니라 51석 확보 여부가 핵심
- 최근 경합주 조사에서는 민주당의 경쟁력이 확인되며, 공화당이 방어해야 할 지역도 넓어지고 있음
 - [표 3]은 Silver Bulletin의 10월 27일 집계에 나타난 민주당 우세를 제시

[표 3] 주요 상원 경합주의 양당 격차

경합주	민주당 우세 격차	현재 해당 의석
메인주(Maine)	2.4%p	공화당
텍사스주(Texas)	2.5%p	공화당
오하이오주(Ohio)	3.0%p	공화당
알래스카주(Alaska)	3.6%p	공화당

※ Silver Bulletin의 10월 28일 공개 설명에 제시된 집계. 상원 전체 경합주를 망라한 표는 아님

- 상기 지역들은 민주당이 공화당 의석을 빼앗을 수 있는 기회를 보여주지만, 격차가 2~4%p 수준이어서 막판 투표율과 조사 오차에 따라 승패가 바뀔 수 있는 접전

- 여러 주에서 공화당 지지가 실제보다 낮게 측정됐다면 민주당의 예상 획득 의석도 함께 줄어들 수 있으며, 반대로 현재 우세가 실제 투표로 이어지면 민주당의 양원 장악도 가능한 상황
-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하면, 트럼프는 하원의 입법·예산 견제에 더해 ‘고위직 인준’ 등에서도 제약을 받게 됨
 - 한국 입장에서는 어느 당이 상원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안보·통상 관련 인사와 위원회의 협상 구도가 달라지는 바, 하원 교체 여부와 별개로 상원 결과를 독립적으로 추적해야 하는 이유

④ 종합 판단: 하원 교체에 우선 대비하고, 양원 교체까지 준비

- 현 판세는 ‘민주당의 하원 탈환 가능성은 높고, 상원 다수당도 다투는 구도’로 판단
 - 전국 여론과 지역구 평가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하원에 비해, 상원은 소수 경합주의 작은 격차가 다수당을 결정한다는 차이가 있음
 - 한국은 공화당의 양원 유지에 기대어 대응계획을 세울 수 없으며, 민주당 하원과 의 협의 준비를 우선하면서 양원 교체에도 대비해야 함

III. 파급 영향: 美 권력 재편 속 안보·통상 압박과 정부 대응의 취약점

① 트럼프의 국내 제약과 대외 압박은 별개로 작동

-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을 잃더라도 미국 내 생산·고용 확대와 동맹국의 방위 부담 증대라는 정책 목표까지 사라지지는 않음
 - 국내 입법이 막힌 트럼프가 미북 접촉과 투자 발표를 외교 성과로 활용하려 할 경우, 한국에는 투자 집행과 동맹 기여를 서두르라는 요구가 이어질 수 있음
 - 의회는 예산·입법으로, 상원은 인준으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음. 한국은 대통령의 정치적 약속과 의회 검토·법적 절차가 필요한 사안을 구분하지 못하면 합의 발표 뒤에도 이행 지연과 추가 협상을 떠안을 위험

② 안보: 미북 거래의 위험에 동맹 조율의 취약점까지 중첩

□ 미북 접촉: 미국 본토의 안전과 한국의 핵위협 감소는 별개

- 선거 이후 미북 접촉이 재부상하면, 중국의 중재와 한국의 협상 참여 여부가 중요해질 전망

- 통일연구원은 10월 26일 김정은의 단둥 방문을 분석하며, 북중 핵심 외교 인사의 동행·참석을 근거로 ‘미북 접촉 사전 조율’과 ‘중국의 중재 가능성’을 제기¹⁾
 - 한국이 협상 의제와 조건에 관여하지 못하면, 북핵의 직접 당사자이면서도 미국·북한·중국이 정한 결과를 전달받는 처지에 놓일 위험
- 가장 경계할 시나리오는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한하는 대신 한국을 위협하는 기존 핵전력은 남겨두는 거래
- 여기에 연합훈련 축소와 제재 완화가 결합되면, 미국은 본토에 대한 위협 감소를 성과로 얻지만 한국은 북핵을 그대로 마주한 채 억제력까지 약화될 수 있음. 미국의 안보 성과가 한국의 안전으로 이어지지 않는 위험
 - 이재명 정부가 대화 촉진자 역할에만 머물면 회담 개최를 성과로 내세우면서도 정작 한국의 안전은 개선하지 못할 우려. 핵위협 감소 없이 회담 개최 자체를 성과로 포장해서는 안 됨

□ 정보협력: 신뢰 회복 없이는 도발 대응과 협상 참여 모두 취약

- 정보협력 갈등은 정보량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행동을 제때 파악하고 미국과 같은 상황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의 문제
- 강경화 주미대사는 10월 12일 ‘미국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고, 백악관 고위급 소통에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 27일 조현 외교장관도 정보공유 제한의 해제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함²⁾
 - 협력 차질이 해소되지 않으면 군사적으로는 조기경보와 대응 판단이 늦어지고, 외교적으로는 미북 접촉을 파악하고 협상 의제를 사전 조율할 여지가 줄어들 위험
- 정부의 ‘동맹에 문제없다’는 낙관론으로 정보협력의 복원 여부를 가릴 수 없음
- 정보공유의 복원 범위와 이해결 사안, 고위급 협의의 작동 여부가 정부의 설명을 검증할 기준. 동맹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채 대화 재개만을 기대하는 접근은 한국의 협상 참여를 보장하지 못함

□ 전작권·동맹 역할: 한국의 책임 확대와 미군 지원을 함께 검증

- 2026년 미국 국가국방전략(NDS)은 한국의 대북 억제 책임 확대와 미국의 ‘중요하지만 더 제한적인 지원’. 무기 구매·주한미군 역할·역외 기여 등 동맹 부담 조정은

1) 정은이, “김정은 위원장 단둥 방문 평가와 북미 정상회담 전망”, 통일연구원, 『온라인 시리즈』 CO26-78, 2026.10.26.

2) 연합뉴스, 「강경화 “美, 한미정보협력에 문제 제기…백악관 소통도 한계”」, 2026.10.13.; 「조현 “전작권, 우리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리라고 믿어”」, 2026.10.27.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³⁾

- 한국의 임무는 늘고 미국의 정보·증원전력·확장억제 지원이 불명확해지면, 자주적 역할 확대가 실제 방위능력 강화로 이어지기 어려움. 전작권 전환도 한국군 지휘 능력과 미군 지원체계를 함께 따져야 하는 이유

○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내년 초 연기로 정부가 연내 SCM을 통해 검증과 전환 목표연도 도출을 추진하던 일정도 수정이 불가피

- 한미는 10월 28일 회담에서 12월 워싱턴 국방장관회담과 2027년 초 SCM 개최에 합의. 전작권의 적기 전환을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으나 전환 목표연도와 조건 충족에 관한 최종 합의는 공개하지 않음⁴⁾
- 일정 합의를 전작권 이견 해소로 포장해서는 안 됨. 12월 회담에서도 한미 공동 검증과 미군 지원 조건을 확정하지 못하면 정치적 시간표와 실제 준비태세의 간극은 해소되지 않음

○ 전작권 독자 행사론은 지휘체계를 바꾼 뒤 미군의 지원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답하지 못함

- 핵잠·원자력 협력도 정상의 지지 표명만으로 기술·핵연료가 확보되는 것은 아님. 사안별 법률·기술 협의와 필요한 의회 절차가 남은 상황에서 미국의 정치 변화까지 겹치면, 발표와 실현 사이의 간극이 커질 수 있음

③ 통상: 투자 집행을 서둘러도 한국의 실익이 보장되지는 않음

□ 대미 투자: 발표 성과가 차입·손실 부담으로 돌아올 위험

○ 미국의 투자·고용 성과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미 투자는 자금조달과 손실 책임을 검증해야 하는 단계에 진입

- 10월 1일 텍사스 가스발전은 첫 사업으로 확정됐으나 알래스카 LNG는 공식 문건의 검토 단계와 트럼프의 투자 발표 사이에 차이 발생. 검토 사안이 투자 약속으로 굳어지면 후속 협상에서 부담이 확대될 위험
- 20일 국감에서는 첫 투자금 송금 후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가 지적됐으며, 26일 공사는 국제신용등급 획득을 발표하며 향후 채권 발행 등 재원 조달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⁵⁾

3) U.S. Department of War, *2026 National Defense Strategy*, January 2026, pp. 20-21.

4) 연합뉴스, 「한미 안보협의회의 내년초 개최하기로…“전작권 전환 적기에”」, 2026.10.29.

5) 뉴스핌, 「[2026 국감] 3500억불 대미투자, 위험관리 ‘뒷북’ 자료는 ‘비밀’…여야 한목소리 질타」, 2026.10.20.; 전자신문, 「한미전략투자공사, 무디스·S&P서 한국 정부와 동일 신용등급 획득」, 2026.10.26.

- 차입에는 이자가 붙고,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은 수익을 깎음. 투자금 회수가 늦어져도 조달 비용은 발생하므로 ‘얼마를 투자했나’보다 ‘어떤 조건으로 회수하나’가 중요
 - 정부의 ‘상업적 합리성’은 장기 구매계약·금융비용·추가 출자 의무·손실분담으로 증명돼야 함. 미국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집행만 앞당기면 동맹관리의 비용이 한국의 재정·기업 부담으로 남을 수 있음

□ 관세·시장접근: 민주당 승리를 통상 압박 해소로 오판해서는 안 됨

- 물가 부담은 일부 관세 조정의 유인이지만, 미국 산업·노동자 보호 요구도 지속. 관세가 조정돼도 현지 생산·에너지 구매·비관세장벽 개선 요구는 남을 수 있음
 - 디지털 규제와 데이터 이동도 협상 대상인 만큼 국내법의 비차별적 적용을 입증하고 대미 설명을 일관되게 관리해야 함. 국내 정치용 대응이 통상 마찰을 키우면 비용은 기업과 수출 현장에 전가
 - 의회 교체 이후에는 기존 합의의 검증도 강화될 수 있어, 미국 내 관련 산업과 지역구의 지지를 얻지 못한 합의는 후속 입법·예산 협력에서 추진력을 잃을 위험

□ AI·반도체·조선: 돈을 내는 역할에서 산업적 권리를 확보하는 협상으로

- 한국의 자산은 투자금뿐 아니라 미국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AI·조선·원전의 기술과 생산능력
 - AI·반도체는 첨단장비·기술 접근과 중국 사업 운영 조건, 조선·원전은 수주와 핵심 공정 참여가 중요. 자금 투입이 늘어도 한국 기업의 참여와 권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투자 부담만 떠안고 산업적 실익은 놓칠 위험
 - 한국 기업의 미국 내 고용·공급망 기여는 새 의회와 협력할 근거. 정부가 산업·규제·외교안보를 따로 관리하면, 한국의 기술·생산능력을 협상 카드로 쓰지 못한 채 추가 요구에 끌려다닐 우려

④ 종합 평가: 정부의 대응 부실이 미국의 요구를 한국의 추가 부담으로 키울 위험

- 미국의 권력 재편은 한국에 협상 통로를 넓힐 기회이지만, 그 기회가 자동으로 국익이 되지는 않음
 - 정보협력과 안보 조율을 복원하지 못하고 투자에 상응하는 시장·수주·기술협력 조건도 확보하지 못하면, 한국은 미국 행정부의 요구와 의회의 검증 사이에서 부담만 늘어날 수 있음

[표 4] 중간선거 이후 주요 현안과 한국의 위험

분야	현안	선거 이후 주목할 변화	한국이 경계할 핵심 위험
안보	미북 직거래	트럼프의 외교 성과 추구, 중국 중재 가능성	미 본토 위협만 줄이고 한국을 겨냥한 핵전력은 남기는 거래
	정보 협력	협력 정상화와 고위급 소통의 실제 작동 여부	도발 징후 판단과 미북 협상 사전 조율의 차질
	전작권·동맹	한국의 책임 확대와 ‘전환 조건’ 검증	한국의 임무는 늘고 미군 지원은 불명확해지는 상황
	핵잠·원자력	사안별 법률·핵연료 협의와 필요한 의회 절차	정치적 지지가 실제 기술·핵연료 확보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
통상	대미 투자	집행·고용 성과 요구와 외화조달	검증보다 집행이 앞서 조달 비용과 손실 부담 확대
	관세·시장접근	품목별 조정과 규제 개선 요구	관세 조정의 대가로 시장 개방 등 다른 부담을 떠안는 협상
	AI·반도체·조선	기술통제·공급망·첨단산업 협력 조건의 변화	투자하고도 시장·수주·기술 접근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

※ 선거 이후 변화는 조건부 전망이며, 확정된 미국의 조치와 구분

IV. 대응 과제: 동맹관리 책임 추궁과 안보·산업 이익 확보

① ‘한국 배제의 북핵 거래 반대’를 우리의 원칙으로 제시

- 우리는 미북대화의 성과를 ‘회담 개최’가 아닌 ‘한국에 대한 핵위협 감소’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정부에 협상 원칙을 제시하도록 요구
 - △미 본토 위협만 줄이고 한국에 대한 핵위협은 방치하는 거래 반대, △북한의 검증 가능한 조치에 상응하는 보상, △연합훈련·확장억제·주한미군 관련 사안의 사전 협의를 핵심 기준으로 설정
- 선거 직후 원내지도부와 당 국제위원회는 미 의회의 한반도 관련 의원 및 외교·군사위원회 양당 인사와 협의 추진
 - 우리의 안보 원칙과 한국의 우려를 담은 <공동 설명자료>를 마련하고 의원실 간 협의에 착수. 한국의 핵심 안보 요구를 미 의회의 질의·청문회·관련 법안 검토에 반영하도록 협의
 - 선거 직후 당선·유임 의원과 접촉하고, 새 의회가 출범하는 2027년 1월에 상임위 구성에 맞춰 협의 대상을 확정. 연말 현안은 현 의회와 조율해 대응 공백 차단

② ‘동맹 이상무’ 낙관론을 검증하고 정보보안·수습 실패의 책임 추궁

- 정책위와 정보·외통·국방위 간사는 정부의 설명을 대조하고, 미해결 사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 비공개 보고를 요구
 - 정보협력은 제한 범위·해제 여부·재발 방지 조치, 전작권은 조건 충족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미군 지원체계·SCM 협의 일정을 확인. 정부가 ‘협의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지 못하도록 사안별 후속 보고 시점을 요구
 - 정보보안 위반이나 수습 실패가 확인되면 책임자 문책과 인사 조치를 촉구. 문제를 축소한 정부 설명과 실제 협력 상태가 달랐는지도 함께 검증
- 전작권은 정치적 시한보다 조건 충족 및 연합방위 능력을 우선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여권의 독자 행사론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요구
 - 지휘체계 변경 이후 미군의 정보·증원 지원을 보장할 합의 없이 일정을 앞세우는 추진에 제동. 핵잠·원자력 협의는 법률·핵연료·후속 일정별 이행표를 제출받아 발표 성과와 실제 진전을 대조

③ 대미 투자 부실심사를 차단하고 국민 부담·손실 책임 추적

- 관련 상임위는 첫 집행 사업부터 ‘얼마를 부담하고 무엇을 확보했는가’를 검증하고, 후속 사업의 계약·집행 전에 핵심 조건을 보고하도록 요구
 - △장기 구매계약, △차입금리·공사비 상승 시 수익성, △추가 출자·손실 책임, △한국 기업의 수주·기자재 공급 조건을 우선 점검. 정부의 예상 수입이 금융비용과 위험을 반영한 실제 수익인지 확인
 - 이미 집행한 사업은 사전 심사의 적정성을 따지고, 검토 중인 사업은 미국의 발표만으로 투자 의무가 확대되지 않도록 양국 문건과 계약을 대조
- 심사·보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시정과 책임을 요구하고, 통제의 사각지대는 보완입법으로 해소
 - 중대한 조건 변경과 추가 재정부담을 국회가 뒤늦게 통보받는 일이 없도록 보고·재검토 절차를 점검. 무조건적인 집행 독촉이나 지연이 아니라 국민 부담을 통제하고 실익을 확보하는 것이 당의 기준

④ 업계의 요구를 미국 의회에 연결하는 실무 외교 추진

- 추후 업계 간담회에서 반도체의 기술·장비 접근, 조선의 사업 참여, 원전의 수주·기자재 공급 등 미국 측 협의가 필요한 우선 과제를 선정

- 한국 기업 투자 지역 의원과 소관 위원회별로 협의 대상을 정하고, 현지 고용·생산 기여와 해결 과제를 함께 제시.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투자 제안보다 이미 제공하는 기여에 상응하는 권리를 확보하는 데 집중
 - 정책위원회는 과제마다 담당 의원·미국 측 협의 상대·후속 일정을 정해 추진 상황을 점검. 의회 외교의 성적표를 방문 횟수가 아닌 기업 애로 해결과 구체적 협력 조건 확보로 제시
- 향후 정부의 동맹관리 실패에는 책임을 묻고, 미국의 요구에는 한국의 안보와 산업적 실익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함
- ‘동맹 이상무’라는 낙관론에는 복원 실적을, 투자 성과 포장에는 수익과 계약조건을 요구. 안보 원칙을 흔드는 결정에는 제동을 걸고, 정부가 확보하지 못한 미국 의회와의 협력 통로는 우리가 넓혀야 함